

脫냉전기 新美日 동맹과 日本의

군사력 강화전략

김년수(한국전자통신연구원)

脫냉전기 新美日동맹과 日本의 군사력 강화 전략

- 목 차 -

- I. 서론
- II. 脫냉전기 안보환경과 일본의 인식
- III. 對美 군사협력체제 강화
- IV. 일본의 군사적 능력 및 역할확대
 - 1. 활동영역과 전력운용능력 강화
 - 2. 군사·정치적 영향력 증대
 - 3. MD와 기술협력 강화
- V. 결론

- 요약 -

이 글은 탈냉전기 일본의 군사적 능력과 역할 강화전략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전망한다. 일본은 종래의 경제우선·경군비전략에서 벗어나 군사적 요소를 중요 외교 자원으로 올려놓고 이를 대외정책 수단으로 구사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군사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군사·정치적 영향력을 국제사회를 향하여 적극적으로 펼쳐 보이겠다는 국가전략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분명한 일본의 국가적 명제가 되고 있다.

일본은 이러한 군사적 능력과 역할 강화를 독자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미국과 역할분담을 확대하는 방법을 통해 도모하고 있다. 일본은 탈냉전기 불확실·불투명한 안보환경에 대응하여 미 군사력에의 안보의존을 여전히 중요시하면서, 미 군사력 우위를 전제로 하는 미·일 안보체제 내에서 군사적 역량 확충을 피하겠다는 전략을 선택한 것이다.

일본은 미국과의 공조체제 강화를 통해서 냉전시기와는 다른 전력구조와 양질의 무기체계를 계속적으로 확보하고 군사적 역할 확대를 도모하겠지만, 그렇다고 대규모 병력을 해외로 투사하고 본격적인 원거리 타격능력을 갖춘 군사력을 보유하겠다는 의도는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탈냉전기 신美日동맹과 日本의 군사력강화 전략

I. 서론

일본은 전후 냉전기간 군사강국 소련의 위협에 직접적으로 직면하면서도 군사적 역할을 축소하는 소극적 군사전략을 채택하였다. 일본은 자국 유사의 경우에서도 단지 소규모적이고 한정적인 침략에 대해서만 자력으로 적을 격퇴하고, 이 외의 위기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힘에 의존하여 침략자를 물리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또한 일본이 유사시 맡게 될 대미(對美) 방위협력 내용도 일본 영내의 군사기지 제공 등 극히 낮은 수준의 군사협력의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았다.

1980년대 군사 역할론자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가 등장한 이후 공산주의 위협에 대항하여 한때 일본 열도의 불침함모론, 해상교통로방위 등을 공언하기도 하였으나, 냉전기간 견지해 온 경제우선·경군비전략이라는 정책구도를 탈피하지는 아니 하였다.

이러던 일본이 냉전체제 종식 이후 소련의 위협과 세계적 차원의 대규모 분쟁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군사협력 공조체제를 오히려 강화하면서 군사적 능력과 역할 확대를 꾀하고 있다. 탈냉전기 일본 군사전략의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던 것은 1995년 11월의 「방위계획 대강」의 확정과 이를 근간으로 이뤄진 1996년 4월 「미·일안보공동선언」, 1997년 9월의 「미·일방위협력지침」 체결이다. 주요 골격을 보면, 일본은 대미 군사협력 영역과 활동을 확대하고, 주변유사시 미군에 대한 지원체제를 갖추기로 하였다. 그리고 미국과 군사기술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일본은 다시 2004년 12월 새로운 「방위계획대강」을 수립하고, 군사적 능력과 역할 강화를 한층 도모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은 탈냉전기에 들어와 첫째 안보상황에 대한 어떠한 인식에 의거하여, 군사적 능력 및 역할 강화를 추구하게 되었는가? 둘째 군사적

능력 및 역할 강화를 위해, 어떠한 전략을 수립하였는가? 셋째 구체적인 군사적 능력 및 역할 강화 내용은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논문은 탈냉전기 일본의 군사적 능력과 역할 강화전략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전망한다.

국가의 안보정책은 국내의 정책결정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국익을 위해 최선의 대안을 선택한다고 볼 수 있다. 안보문제는 국가의 사활적인 가치와 관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도의 합리적 계산과 판단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시각으로부터 엘리슨(Graham T. Allison)의 합리적 행위자 모델 (rational actor model)을 원용하여 탈냉전기 대미 군사협력을 통한 일본의 군사력 강화전략을 분석한다.

일본은 제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을 주축으로 한 연합국에 패전한 후 미국과 안보조약을 맺고 미국의 핵우산 밑으로 들어가 안보를 도모해 오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군사정책은 미국과의 외교안보 관계 틀의 재정립을 통해, 즉 외교정책결정이론을 기초로 하여 효율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우선 전후 일본 군사정책의 결정적 동인이 되고 있는 탈냉전기 안보환경과 미국의 군사정책을 일본이 어떻게 인식하는지 분석한다. 국가의 대외 군사정책은 안보환경에 대한 정책결정자의 체계적 인식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군사적 능력과 역할 강화를 위해, 일본이 어떠한 전략을 선택하였는지를 연구한다. 일반적으로 군사정책은 군사력과 경제적 요소같은 국가적 능력을 고려한 사용 의지를 통해서 구체화 된다.

그리고 일본이 군사적 능력과 역할 강화를 현상(現狀)에 기초하여 어떻게 구체화 하였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탈냉전기 일본의 대미 군사협력 공조전략이 잘 함축되어 있는 1995년 11월 「방위계획대강」과 1996년 4월 「미·일 안보공동선언」, 1997년 9월 「미·일 방위협력지침」, 2004년 12월 10일 일본 각의에 승인된 「방위계획대강」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2005년-2009년)」(이하 「신중기방」이라 한다)등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II. 脫냉전기 안보환경과 일본의 인식

군사전략의 수립은 안보상황에 대한 정책결정자의 객관적인 인식¹⁾에서부

1) 슈나이더(Richard C. Snyder)와 브룩(H.W.Bruck), 사핀(Burton Sapin)은 정책결정자의 상황인식은 정책결정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브레이브룩(David Braybrooke)과 린드블롬(Charles E. Lindblom)은 정확한 정보와 인식을 바탕으로 한 정책결정자의 정책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코플린 (William D. Coplin)과 케글리(Charles W. Kegley, JR.)는 주어진 시간에 국가가 경험하는 국제환경에 대한 상황인식이 외교정책 행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외교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너무 광대하고 복잡·다양하고, 모든 변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책결정자의 상황인식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고 있기도 하다.

홀스티 (Ole R. Holsti)는 외교 정책결정자는 믿음체계 (belief system)를 통해 현실 세계를 본다고 주장한다. 브론 펜브레너 (Urie Bronfenbrenner)도 냉전시대 미·소 연구를 통해, 양국은 모두 거울이미지 (mirror image)를 갖고 상호 인식하였다고 말했다.

도거티 (James E. Dougherty)와 팔츠그라프 (Robert L. Pfaltzgraff, Jr.)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자기들이 인식하는 것을 객관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잘못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싱거 (J. David Singer)는 "긴장과 불안 상태에서 정책결정자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행동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도 변수를 모두 고려할 수 없으므로, 합리적 인식은 제약을 받는다. : Richard C. Snyder, H.W.Bruck, and Burton Sapin, "The Decision - Making Approach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Politics," in James N. Rosenau (ed.), *International Politics and Foreign Policy* (New York : The Free Press, 1969), p. 200. ; David Braybrooke and Charles E. Lindblom, "Types of Decision - Making," in James N. Rosenau (ed.), *International Politics and Foreign Policy* (New York : The Free Press, 1969), pp. 209 - 216. ; William D. Coplin and Charles W. Kegley (eds.), *Analyzing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 Praeger Publishers, 1974), p. 17, 20. ; Ole R. Holsti, "The Belief System and National Image : A Case Study," in William

터 출발한다. 이론적으로 보면 국가는 외부의 안보환경이 변화하면, 국가의 가치보존을 위해 외부의 환경변화를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합리적 전략²⁾을 수립한다. 일본의 전후 군사정책은 외부 안보환경,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미국의 안보정책 변화가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은 전후 냉전기 소위 「기반적 방위력구상」³⁾을 근간으로 다른 나라와 안보·정치·경제 등 다면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군사적 역할을 억제하는 수동적 군사전략을 채택하였다. 일본을 에워싼 국제정세는 전반적으로 안정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기반적 방위력만으로도 충분히 일본의 안보 유지는 물론 국익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안보환경이 지역적으로는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동·서간 힘의 균형관계나 미·일안보체제에 의한 억제효과로 지구적 규모에서의 안보환경의 안정과 일본 자신의 안전은 보장된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⁴⁾

D. Coplin and Charles W. Kegley(eds.), *Analyzing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 Praeger Publishers, 1974), pp. 22-31. ; Urie Bronfenbrenner, "The Mirror Image in Soviet-American Relations," in William D. Coplin and Charles W. Kegley (eds.), *Analyzing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 Praeger Publishers, 1974), pp. 161-165. ; James E. Dougherty & Robert L. Pfaltzgraff, Jr., *Contending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New York : J. B. Lippincott Company, 1971), pp. 316-317.

2) Graham T. Allison, "Conceptual Models and the Cuban Missile Crisis," in William D. Coplin and Charles W. Kegley (eds.), *Analyzing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 Praeger Publishers, 1974), pp. 56-70.

3) 구체적 방위력 정비방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 ▲방위상 필요한 각종 기능을 갖추고, 후방지원체제를 포함한 조직 등의 균형체제를 유지할 것 ▲이를 기반으로 평시에 충분한 경계태세를 구비하고 한정적 또는 소규모침략 사태에 유효하게 대처할 것 : 防衛研究所(日本), 『東アジア戦略概観 2001』, p. 247.

4) 기반적 방위력 구상은 냉전기 군사력 강화론자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들 주장을 정리해 보면, ▲기반적 방위력은 일·미안보체제가 유효하게 기능하고 있는 한 큰 전쟁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는 반대로 일·미안보체제를 유효

그러나 이러한 「기반적 방위력구상」에 대한 믿음은 탈냉전기에 들어서면서 저하되고 있다. “「기반적 방위력구상」의 유효한 부분은 계승하되, 새로운 위협이나 다양한 사태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위력이 요구된다.”⁵⁾와 같은 인식을 근간으로 한 새로운 일본의 안보전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기반적 방위력구상」이 탈냉전기 일본의 안보전략과 국익확보에 필요조건이 되고는 있지만, 결코 충분조건은 될 수 없다는 논리이다. 군사력 강화를 지향하는 일본의 이같은 인식전환을 초래한 요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련의 해체와 미·일 안보체제에 대한 신뢰 감소를 들 수 있다. 냉전기간 미·일의 최대의 공적이었던 소련의 존재는 양국을 결속시키는 결정적 동인이었다. 양국은 소련을 정점으로 한 공산세력의 위협 저지가 국가 대외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있었다. 소련의 해체는 결과적으로 양국의 이러한 공통의 이해관계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미국은 전략적 중요성과 동맹결속 정도를 주요 변수로 하여 새로운 관계 정립을 일본에 요구하였다.⁶⁾ 이는 양국관계가 종래의 ‘불변변수’ 이데올로기와는 달리 주변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유동성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곧 일본의 대미 안보의존의 신뢰성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게 기능시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냉전기의 군사적 역할을 축소하는 소극적 전략은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미안보체제의 기반을 강화하여도 큰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 그럴 경우 소련이 주요 도전세력이 될 것이다. 소련이 미국과 정면 충돌을 회피하고 극히 단시간 내에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면, 일본은 독립으로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적응력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 유사외의 경우 “소규모적이고 한정적인 침략에 대해서만 단독의 힘으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침략의 규모와 형태가 독자적으로 저지하기 곤란할 때는 강인한 저항을 하나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지원을 받아 배제한다.”는 방위전략은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堀江正夫 外, 『日本の防衛戦略, 有事の對策』(東京 : オリエンツ書房, 1977), p. 350.

5) 防衛廳(日本), 『防衛白書 2005』, p. 254.

6) 森本敏, “美軍再編計劃と日米同盟の將來,” 『正論』 2005年 3月号, pp. 80-81.

일본 국내는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응하여 군사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힘을 얻기 시작하였다. 전쟁포기·전력불보유·교전권부인을 담고 있는 헌법 제 9조의 개정은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냉전종식과 함께 사회당의 몰락 등과 같은 개헌 저항세력의 존재가 급격히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가 제기한 보통국가론의 공론화도 군사적 역량강화를 요구하는 이러한 일본의 사정을 잘 말해준다. 오자와는 보통국가론을 통해, “냉전이 종식되고 새로운 세계질서의 구축이 세계적인 과제로 되어 있는 현재 자위대의 역할은 극히 중요하다 ... 자위대의 활용을 위해서 자위대의 활동전략을 새로 수립하고, 조직을 재편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일본의 안보정책은 현재의 수동적 전수방위전략으로부터 능동적인 평화창출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⁷⁾는 것이다.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 교수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탈냉전기 일본의 안보정책의 현실과 방향을 잘 함축해서 표현해 주고 있다. “일본에게 있어서 현재 일·미동맹 정책 이상의 유용한 안보정책은 없다. 하지만 동맹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일·미동맹도 이러한 것에서 예외적일 수는 없다.”⁸⁾고 전제하면서, 그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 주둔의 장래를 생각할 때, 일본은 앞으로 해상수송로의 안정·경제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독자적인 수행 능력을 갖춘 방위력을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⁹⁾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 경제적 측면이다. 냉전체제 하에서 일본 경제는 미국의 협조 하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일본은 1980년대 말에 이르러 세계 GNP의 15%를 차지하면서, 미국 다음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였다.¹⁰⁾ 그러나 냉전종식 이후 이데올로기가 퇴색하고 경제적 실리중시의 국제질서가 조성되면

7) 小澤一郎, 『日本改造計劃』(東京: 講談社, 1993), pp. 118-120.

8) 森本敏, 『ガイドラインと有事法制/極東有事で日本は何が出来たのか』(東京: PHP研究所, 1999), p. 112.

9) 森本敏(1999), pp. 120-121.

10) 이갑윤, “미국 패권과 일본의 도전,” 『21세기 미국패권과 국제질서』(서울: 도서출판 오름, 2000), p. 401.

서 미·일의 경제적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일본은 미국에 전적으로 방위를 의존하고 있는 이상, 미국으로부터 정치·경제적 예측을 벗어나기 어려우므로, 향후 예상되는 경제적 마찰은 일본에게 큰 손실을 안겨다 줄 것으로 보았다.

클린턴 행정부의 초기 대외 정책의 최대 이슈 중의 하나는 무역수지, 특히 일본과의 무역적자를 해소하는 것이었다. 미국은 앞으로의 가장 강력한 경쟁상대는 일본이라고 보고 국내시장 개방 등 다양한 압력을 일본에게 행사하였다.¹¹⁾ 이러한 압력에 대해 일본이 분명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서 미·일간 경제관계는 한때 혼미를 거듭하였다. 1994년 2월 호소카와 수상은 미국을 방문하고 클린턴 대통령과 가진 공동기자회견 석상에서,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일본의 내심을 그대로 내비쳤다.¹²⁾ 즉 일본은 일본 국내 시장을 개방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겠다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보인 것이다. 이에 앞서 클린턴 대통령은 “내용이 없는 협상을 하기보다는 하지 않는 편이 좋다.”며 일본의 불성실한 협조자세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였었다.¹³⁾

미·일간의 경제적 갈등은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못한 채, 1990년대 중반을 넘기면서 서서히 증식되어 가기는 하였지만¹⁴⁾, 그러나 양국의 경제적 마

11) ラルソ・コサ,トマス・マクナウア, “アジア太平洋地域の平和安定と日美安全保障関係の役割,” 『アジア時報』1998年 4月號, p. 33. ; 川上高司, 『米國の對日政策』(東京 : 同文館出版, 2001), pp. 197-198.

12) 渡辺昭夫・伊奈久喜, “安全保障環境の變化と日美關係への衝擊,” 細谷千博・信田智人, 『新時代の日美關係』(東京 : 有斐閣, 1998), p. 50.

13) 渡辺昭夫・伊奈久喜(1998), p. 50.

14) 이는 무엇보다도 일본과의 안보협력의 중요성이 미국 내에서 새삼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미·일간 경제마찰이 점점 심각한 국면을 드러내게 되자, 전후 단단히 결속해 온 양국간의 안보관계가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부각되었던 것이다. 미국은 글로벌 군사 패권전략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일본의 군사 전략적 가치는 여전히 중요하므로, 양국관계가 결코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 川上高司(2001), pp. 225-226. ; 防衛研究所(2001). p. 211.

일·미 경제마찰의 증식은 경제적 측면의 요인도 많이 작용하였다. 즉 일본 경제의 약체화와 미국 경제의 호조는 일·미 경제 마찰이 수면 이하로 잠복하게 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당시 미국 경제는 쌍둥이 적자 가운데 연방재정적자는 흑자로 전환되었고, 경

찰은 근본적인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으므로, 갈등 양상은 언제든지 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경제적 측면에서도 일본은 강력한 군사력 정비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미국을 '가부장'으로 하고 일본이 '아들'의 위치로 되어 있는 미·일안보체제 하에서 일본은 경제적 거래에서 항상 미국에 국익을 빼앗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¹⁵⁾

셋째는 국제정치적 측면이다. 일본은 전후 경제우선의 외교정책을 견지하면서 경제적 자산을 안보정책의 주된 수단¹⁶⁾으로 활용하는 대외전략을 채택하여 왔었다. 냉전기간 국제사회로부터 '안보무임승차'¹⁷⁾라는 비판을 들어

계 성장률 상승·저인플레이션·수출의 확대 등이 나타나고 있었다. : 防衛研究所(2001), P. 210.

15) 島川雅史, 『アメリカ東アジア軍事戦略と日美安保體制』(東京: 社會評論社, 1999), p. 60.

16) 일본이 대외관계에서 경제력을 근간으로 정치적 지위 확대를 도모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후반부터이다. 후쿠다(福田)수상이 1977년 일본은 군사대국을 지향하지 않고 평화적인 외교에 역점을 두겠다고 선언한 것이 그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자원과 시장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모든 국가와 우호 관계를 갖겠다는 이른바 경제력을 근간으로 하는 일본의 '전방위 평화외교(全方位 平和外交/Multi-Directional Policy)'이다. 전방위 평화외교는 소노타(園田)외무부 장관이 1979년 9월 25일 유엔총회에서 행한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그는 "일본 외교 정책의 기초는 일본의 경제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정치적 영향력을 최대한 발휘함으로써,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일본의 이러한 '전방위 평화외교' 대두는 긴장완화 다극체제라는 당시 신국제질서가 형성되고, 또 일본이 경제적으로 부강해지면서, 미국 등 서방 선진국과 경쟁적인 관계가 노정됨에 따라 제기되었던 것이다. '전방위 평화외교'는 정부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tance)를 중심으로 하여 강화되어 갔다. 일본은 정부개발원조를 1978년 아프카니스탄 사태 이후 파키스탄, 터키 등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해가면서 활발히 추진하였다. : 大外宏, "日本の ODAと 國際政治," 五十風武士編, 『日本のODAと 國際秩序』(東京: 國際問題研究所, 1990), pp. 50-51.

17) 안보무임승차론 :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에 걸쳐서 미국에서 제기된 것이다. 미국은 일본이 국가 안전보장을 거의 미국에 의존하면서 경제 활동에만 전념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전쟁에 이어 베트남전쟁에서도 일본은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면서, 오직 경제적 특수의 이익만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강한 불만의 표시이다. 1967년-68년간 일본의 국방 예산이 4,000억엔 전후였던 것에 대해, 미국

가면서까지도, 기본적으로 군사적 능력을 외교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극력 회피하여 왔다.

냉전체제의 붕괴와 함께 형성된 신국제 정치환경은 이러한 일본의 대외 안보전략의 변화를 요구하였다. 걸프전은 군사적 능력을 대외정책 수단으로 전환토록 하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일본은 걸프전에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소위 '인적공헌'은 제공하지 않은 채, 13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경비만 다국적군에 지원하였다. 병력 파견을 통한 군사적 기여를 하지 않은 일본에 대해 국제사회는 경제적 기여를 평가절하하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경제우선·경군비 전략은 더 이상 일본의 국익을 보장하는 합리적 안보정책이 될 수 없었다. 세계 제 2위의 경제력 수준에 상응하는 군사·정치적 영향력을 갖기 위해 군사적 자원을 대외정책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분출하였던 것이다.¹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 획득 노력은 이러한 일본의 군사·정치적 의도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유엔안보리 진출은 군사·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국제적으로 공인받을 수 있는 좋은 방안¹⁹⁾이다. 유엔안보리 진입은 군사적 역할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와다나베 외상은 일본의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 문제와 관련하여, 유엔 현장상 상임이

의 베트남 전비는 최고액의 경우 1일에 8-9조엔에 이르고 있었으므로 미국의 이러한 불만은 충분히 예상될 수 있다 할 것이다. : 川上高司(2001), p. 101.

18) 船橋洋一, "21世紀 軍事力の新役割," 『軍事力の非傳統的 役割과東アジアの安全保障』(東京: 防衛研究所, 2003), pp. 40-42 참조. ; 防衛研究所(日本), 『東アジア戰略概觀 2004』, p. 213.

19) 일본의 안전보장이사회 진출은 국제사회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확대시키는 것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달리 말해서 자신에게 전범국가로 낙인을 찍은 국가들의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이 안전보장이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일본은 과거 역사의 굴레에서 보다 자유로와질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과거 세계 2차 대전에서 침략했던 아시아 국가들의 지지를 받아서 안전보장이사회에 입성하게 되면, 과거의 역사에 대한 일본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국제무대에서, 특히 아시아에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자유롭게 행사하도록 해줄 것으로 보인다. : 변진석, "21세기 일본의 국력과 국제제도," 『國際政治論叢』 제36집 2호, 1996, p. 232.

사국이 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군사참모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면서 정치·군사적 역할을 적극 펼치려는 의도를 표출한 바 있다.

나가시마 아키히사 (長島昭久) 민주당 대표 자문위원은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면서 스스로 억제적인 정책을 취하는 것에 만족하는 시대는 종료하였다. 앞으로는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와 협력하고, 바람직한 지역질서의 형성과 유지를 위해 보다 능동적으로 관여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소극적 안보전략 ‘철학’에서 벗어나 경제력과 군사력을 외교 자원의 중요 요소로서 활용하여 국제사회에 관여하여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²⁰⁾고 말하고 있다.

Ⅲ. 對美 군사협력체제 강화

군사적 능력을 확대하고 군사력을 주요 외교자원으로 활용하려는 국가전략은 이제 탈냉전기 일본이 지향하는 분명한 국가적 명제로 보인다. 군사적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 국가체제를 갖췄다면, 독자적으로 군사력 확충을 시도할 것인가? 이럴 경우 미국과 동맹관계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이러한 정책의 선택을 놓고 일본은 고민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냉전기보다 오히려 더 확고히 하는 즉 역할분담 증대를 통해 군사적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군사·안보전략을 선회하였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1996년 4월 「미·일안보공동선언」과 1997년 9월 「미·일방위협력지침」(이하 「신지침」이라 한다)의 체결이다. 이는 탈냉전기 일본이 직면한 안보여건을 고려한 고도의 전략적 선택이다.

일본은 군사력을 확충하는 데 갖가지 장애물을 갖고 있다. 미국의 견제, 주변국의 저항과 우려, 그리고 일본 국내의 제도적 억제장치들이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일본이 미국의 통제를 벗어나 군사강국이 되는 것을 반대한다.

20) 長島昭久, 『日美同盟の新しい設計圖』(東京: 日本評論社, 2002), pp. 152-153.

탈냉전기 국제 군사·안보질서 재편을 주도하는 미국은 일본을 하위체계로 놓고 이를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때문에 일본이 미 군사력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서 존재해서는 안 된다.²¹⁾ 미 국방차관보 나이(Nye)가 밝힌 탈냉전기 미국의 대일(對日) 안보전략을 보면, “(미국에) 의존적인 일본은 미국의 국익에 도전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 그러나 일본이 성장하면서 의존적인 관계에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 일본의 민족주의를 상호 의존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득책이다.”²²⁾ 미국은 미 군사력 우위를 전제로 하여 안보 보호를 무기로 일본을 정치·군사·경제적으로 예속시키면서, 국익을 극대화 한다는 전략이다.

일본의 군사력 강화는 주변국으로부터 심각한 저항과 우려를 낳을 수 있다. 우선 중국같은 국가로부터 군비경쟁을 야기한다. 중국은 일본의 군비 확충을 중대한 안보위협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일본의 군비강화는 한국 등 기존의 우호 국가와의 관계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친다. 한국 등은 일본이 미국의 통제 밖으로 벗어나 독자 전력화하는 것은 동북아 안보질서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강한 우려를 갖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군사적 능력의 강화는 안보 환경의 악화를 초래한다. 일본으로서는 어떤든 득책이 될 수 없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전후 일본의 군사정책은 국내의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도 제약을 받고 있다. 일본은 전력보유와 행사를 금지하는 소위 평화헌법에 근거하여 전수방위(專守防衛)와 집단자위권의 불행사를 기본적 원칙으로 삼고 있다. 전자의 경우, 방위정책, 방위력의 성격, 그리고 방위활동이 일본의 방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방위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일본에 대해서 긴박하거나 불의의 침해가 있을 것, 이를 제거하기 위해 달리 적당한 수단을 갖고 있지 않을 때 필요 최소한의 실력 행사만 하도록 되어 있다. 후자의 경우, 일본은 자국의 영역 외에서 동맹국과 무력행사에 해당

21) 防衛研究所(日本), 『防衛戰略研究會報告書 2003』, pp. 2-4, 12-13. ; 防衛研究所(日本), 『安全保障國際 シンポジウム平成15年度報告書 2005.3』, pp. 64-66. ; 김강녕, 『동북아 국제정치와 한반도』(부산 : 신지서원, 2002), p. 147.

22) Joseph S. Nye, Jr., "Coping with Japan," *Foreign Policy*, Winter 1992/1993.

하는 작전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견제와 억제장치들에 대해 일본은 미·일 동맹을 적극적으로 수용, 말하자면 '미국의 견제'는 '미 군사력 우위의 비대칭적 구조'로, '주변국의 저항과 우려'는 '미국 통제하의 한정적 군사력 확충'으로, 그리고 '국내 제도와의 상충'은 '대미 안보신뢰성 강화 명분'으로 각각 채색시키면서, 미국과의 역할분담 확대를 통해 군비강화를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일본은 또한 역할분담의 확대 = 미(美) 군사력 우위의 비대칭적 동맹구조의 적극적 수용을 통해, 그 반대 급부로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는 값싼 안보 정책도 종래처럼 계속 추구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탈냉전기 국제 군사질서는 미국이 주도할 것으로 인식했다. 냉전기간 강력한 군사적 경쟁 상대였던 소련의 몰락으로 미국 중심의 단극 구조로의 군사적 질서 재편이 불가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의 이러한 군사 지배체제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한다. 현재 미국의 군사적 우위에 도전할 의도를 가진 국가가 없을 뿐 아니라, 그러한 능력을 소유한 국가도 당분간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일본은 또한 미국 중심의 군사적 단극체제는 무정부적 국제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²³⁾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일본은 미 군사력 우위를 전제로 하는 미·일 안보체제를 받아들이면서, 자국의 안전보장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대미 안보의존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모리모토 사토시 교수는 탈냉전기 일본의 대미 방위협력이 갖는 그 전략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신지침」이 일·미 협력과 관련하여 얘기되고 있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일방의 당사국인 일본의 안전보장 정책의 가이드라인이라는 성격을 지닌다 ... 「신지침」이 이같은 성격을 갖는 것은 아마 일본이 국가 안전보장 정책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정치적 토양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일·미동맹이라는 외압적 수단을 사용해서 일본의 정책을 추구하려고 시도하였다.”²⁴⁾는 것이다.

23) 防衛問題懇談會(日本), 『日本の安全保障と防衛力のあり方 1994』, pp. 2-3. ; 防衛廳(2005), p. 94, 129.

미 군사력 우위를 전제로 한 미·일안보체제 틀내에서 역할분담 확대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일본의 군사적 역량 강화 전략은 크게 두가지 정향을 띠고 있다. 그 하나가 '대미 안보 신뢰성 확보 = 일본 독자 군사력 강화'에 초점을 둔 군사협력이다. 국익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분야는 협력을 확대하고, 국익이 갈등 관계를 노정할 경우는 협력의 유지를 원칙으로 하면서, 독자 군사적 능력을 최대한 확대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대미 군사적 간접기여 확대 = 일본의 군사·정치적 영향력 강화' 전략이다. 미군에 대한 '군사적 간접기여' 강화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군사·정치적 영향력을 증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담확대를 통한 군사적 능력 및 역할강화 전략이 현상(現狀)에 기초하여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 다음 장에서 고찰한다.

IV. 일본의 군사적 능력 및 역할확대

1. 활동영역과 전력운용능력의 강화

가. 작전활동영역의 광역화

일본은 「신지침」의 체결을 통해 주변사태시 후방지역에서 미군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그 지리적 협력영역을 크게 확장하였다. 일본은 미군에 대해 지원을 펼칠 주변지역의 범위를 종래처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일본은 그때 그때의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주변지역이 가변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상황논리'를 펴고 있다. 말하자면 주변지역은 일본의 안전이 위협받고 국익이 침해되는 곳이라면 세계 어느 지역이던 모두 해당된다는 것이다.²⁵⁾

24) 森本敏(1999), pp. 144-145.

25) 青山學院大學의 와타나베 아키오 교수는 안보조약 제6조 “극동에 있어서 국제평화 및 안

일본 정부는 지난 1960년 2월 26일 중의원 안보 특별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견해를 내놓은 바 있다. "(극동의) 안전이 주변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때문에 위협을 받는 경우, 이것에 대처하는 행동의 범위는 위협의 성격 여부에 달려 있다. 반드시 (극동에) 국한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²⁶⁾고 언급하였다. 이는 「미·일 안보조약」 제6조 "극동에 있어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기여하기 위하여"²⁷⁾라는 조항에 근거한 해석이다.

또 1983년도 일본 방위백서는 "1000해리 해상교통로 보호를 목표로 해상 방위력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헌법상 일본이 자위를 위한 실행행사를 할 수 있는 지리적 범위는 반드시 일본 영토·영해·영공에 국한하지 않고, 공해 내지는 그 상공도 포함되지만,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그때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²⁸⁾고 기술하였다. 일본의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 상황에 따라 미군과의 협력범위가 확장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그리고 1996년 4월의 「신지침」에서도 이러한 논리적 연장선상에서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본 주변유사의 개념은 지리적인 것이 아니라, 사태의 성질에 의한 것이다."²⁹⁾며 '상황논리'를 다시 강조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논리'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미군에 대해 펼칠 주변지역은 탈냉전기에 들어와 상당히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은 냉전종식 후, 2001년 10월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여기에 의거하여 2001년

전의 유지"조항과 관련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재일 미군의 행동 범위가 극동에 국한한다는 것을 지칭하지 않는다. '극동에 있어서 국제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가 지구상의 어느 지역에 발생하여도 그 발생지에 미군이 파견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상 그 활동범위는 무한정이다." : 渡辺昭夫, "日美同盟の50年の軌跡と21世紀への展望," 『國際問題』 No. 490 (2001. 1.), p. 31.

26) 松村昌廣, 『美國覇權と日本の選擇』(東京: 勁草書房, 2000), p. 163.

27) 防衛廳(日本), 『防衛白書 1997』, p. 321.

28) 防衛廳(日本), 『防衛白書 1983』, p. 90.

29) 小林秀之, 西譯優, 新ガイドライン研究會, 『超明快譯で読み解く日美/新ガイドライン』(東京: 日本評論社, 1999), pp. 38-39.

11월 자위대 병력 1500명, 함정 6척, 수송기를 인도양까지 진출시키고 미국의 아프카니스탄 공격을 후방에서 지원하였다. 후방지원분야는 급유와 물자 수송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³⁰⁾ 인도양에서 중동에 이르는 해역은 일본의 주요 무역항로로서 국제테러리스트의 테러 대상이 되고 있는 위험지역이다. 일본은 테러 대상으로 지목되는 특정국가일 가능성이 높다.³¹⁾

냉전기만 단 한차례도 시행된 바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인식되어 왔던 주변지역은 극동지역이었다. 인도양은 극동지역을 훨씬 상회한다. 극동지역은 필리핀 이북, 일본과 그 주변 지역·해역·공역, 그리고 한국과 대만을 포함하는 지역에 해당한다.

나. 전력운용능력의 강화

일본은 주변유사시 군사력 운용분야에서도 전투지역이 아닌 곳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일본 자위대가 일본 주변 해·공역에서 역할을 강화하게 되면, 미 해군은 태평양에서 해양통제 작전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협력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첫째 경계·감시활동으로 획득한 정보를 상호 교환한다는 것이다. 일본 자위대는 현재 미국식의 정보기기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미·일이 상호 데이터를 교환하는 것으로 동의만 하면, 실시간 정보교환이 즉시 가능한 수준이다.³²⁾

미 해군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보유한 조기경보관제기를 이용하여 대양에서 광역초계 우세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수역의 특질상 대(對)잠탐지작전 등이 어려운 수역에서 일본 해상자위대를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³³⁾ 그러나 경계·감시활동에 있어서 미국과의 상호협력

30) 防衛廳((2005), pp. 232-233, ; 연현식, “전후 일본 방위정책 변화의 궤적,” 『국방정책연구』 2004년 가을(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p. 184.

31) 金田秀昭, “輕視してはならない「本格的侵攻への備え」...防衛計劃大綱改訂を目前にして...”(2004.11.11), <http://www.okazaki-inst.jp/hkaneda/112004kaneda.html>:(검색일:2005.3.16)
; 防衛研究所(2003), p. 69.

32) 松村昌廣(2000), pp. 169-170.

33) 남창희, “신방위협력지침에 따른 자위대의 역할 확대에 관한 연구,” 『國際政治論叢』

은 집단자위권의 저축 여부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즉 자위대가 미군에게 공격 목표를 제공하는 경우, 미군과의 무력행사의 일체화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일본 헌법이 금지하는 집단자위권에 저축될 수 있다.³⁴⁾

둘째, 수색·구난, 구원활동 및 피난민 대응조치를 펼치기로 하였다. 피해 지역으로의 인원·보급품 수송, 피해지역에서의 위생·통신·수송·피난민 구호·수송활동·응급물자 지원, 일본영역 및 주변해역에서의 수색·구난활동·정보교환 등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셋째, 공해상에서의 기뢰소해 활동에 대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일본이 공해상에서 기뢰소해 활동을 전개할 경우, 미군의 작전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일본 해상 자위대의 대잠초계기는 한반도 주변같은 밀집된 수역으로부터 대양의 광역해역까지 초계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 해군은 필요시 해상교통로 감시활동에도 해상자위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³⁵⁾

넷째, 해·공역 조정활동에서 협력을 벌이기로 하였다. 미·일은 일본영역과 그 주변 해역에서의 교통량의 증대에 대비하여 해상운항 조정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일본영역 주변과 주위의 공역에서의 항공 교통통제와 공역조정을 위해 협력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였다.

일본은 이같이 미군과 협력활동의 확대를 통해서 자위대의 전력운용능력을 대폭적으로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첫째 C4ISR 시스템의 견실한 기반 구축을 도모하게 된다. 일본은 탈냉전기의 불안전·불투명한 안보환경 변화를 조기에 감지하고, 실시간의 의사 결정을 도울 수 있는 주변지역에서의 정보수집·분석과 경계감시 능력의 강화가 필요하다. 일본은 미군과의 협력활동의 강화를 통해 이같은 체제를 원활하게 정비하게 된다.

일본은 미군과의 효과적인 정보교환과 경계·감시협력을 위해서, 해상자

제37집 3호(1998), p. 215.

34) 佐瀬昌盛, “集團的自衛權小賢しき‘解釋護憲’,” 『諸君!』 2004年 5月, pp. 44-56 참조.

35) 남창희(제37집 3호, 1998), p. 215.

위대의 이지스함이나 항공자위대의 조기경보관제기 AWACS 같은 장비의 체계적인 운용이 필요하다. 이지스함은 우수한 경계감시기능과 정보분석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 함정이 보유한 위상 배열레이더 SPY - 1A는 360도의 3차원 탐지 기능과 함께, 18개 목표에 대해서 연속적 미사일 공격이 가능한 동시다목표공격 능력을 지닌다.³⁶⁾ 이지스 체계는 일본이 미국과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탄도미사일 방어체제(MD)의 운용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일본은 해상발사 고고도 발사체계를 이지스함을 이용하여 운용할 계획이다. 일본은 현재 이지스함을 모두 4척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2척을 더 도입할 예정이다.³⁷⁾

항공자위대의 조기경계관제기 AWACS (E-767) 역시 우수한 조기경계감시 정보처리능력과 지휘·통신·통제기능을 보유한다. 예컨대 이 항공기는 공역으로부터의 적의 침입을 경계하고, 우군기의 공격이나 요격부대의 지휘, 공중급유의 유도, 민간기를 포함한 항공교통 관제, 구난활동이나 재해활동의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 항공기가 보유한 수색거리는 자신과 목표기와의 고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최대 탐지거리를 상정할 경우, 한반도 전역은 물론 중국의 북동부와 시베리아까지를 모두 대상 지역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항공자위대는 AWACS의 운용으로 주변지역으로의 원격작전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일본은 2005년 3월 31일 현재 모두 4기의 조기경보관제기를 배치하고 있다.³⁸⁾

둘째로 육·해·공 자위대의 통합운용시스템의 강화이다. 일본은 협력활동의 확대에 따라 주변해역에서 미군과 연대를 주체적으로 도모하게 된다. 이러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일본은 무엇보다도 각 자위대의 통합운용시스템을 우선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³⁹⁾ 냉전기간 일본 3군 자

36) 『조선일보』, 2003년 8월 7일자.

37) 上田愛彦·藤本晶土·杉山徹宗 外 編著, 『軍事データで読む日本と世界の安全保障』(東京: 草思社, 2002), p. 93. ; 『조선일보』, 2005년 3월 31일자.

38) 防衛廳(2005), p. 384.

39) 江口博保, “ミサイル防衛がわが國の防衛體制を変える,” 『DRC年報2004』(2004.10.15), <http://www.drc-jpn.org/AR-8/hyousi-04j.htm>(검색일 : 2005.01.19)

위대의 통합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았다. 자위대는 냉전체제 하에서 소련군의 팽창 저지를 주요 목적으로 둔 미 군사력의 보완전력으로서 주된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각 자위대간 높은 통합도 유지가 필요하지 않았다.⁴⁰⁾

셋째는 주변지역으로 군사력을 투사시킬 수 있는 능력의 보유를 도모하게 된다. 해상자위대는 구원 활동과 피난민 수송을 명분으로 8,900톤급의 수송함 3척을 확보·운용하고 있다.⁴¹⁾ 향후 일본은 다시 2008년 진수를 목표로 병력과 장비의 대량 수송이 가능한 1만 3500톤급 헬기 탑재구축함 2척을 준비 중에 있다.⁴²⁾

또 수송·전개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공중급유기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보유대수는 운용상황을 고려하여 확정짓기로 하였다.⁴³⁾ 공중급유기 도입은 항공기의 항속거리를 배증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넷째 자위대의 대잠능력과 기뢰소해 능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일본은 대(對)잠초계기 P-3C를 2005년 3월 31일 현재 97대 보유하고 있다. 단위면적당 잠수함의 추적과 수상 감시체제에서 세계 최정상 수준이다. 일본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비행성능과 초계능력이 P-3C보다 우수한 차기 고정익초계기 P-X의 도입을 다시 추진 중에 있다.⁴⁴⁾

일본은 또 미군과의 군사협력의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군사력 정비를 적극적으로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하나가 F-15J/DJ 항공기의 성능 개선사업이다. 일본은 1996년부터 이 기종의 제조 능력을 유지하면서, 성능의 개량 작업을 계속적으로 단행해 오고 있다. 일본은 현존 세계 최강의 전투기 F-15J/DJ를 2005년 3월 31일 현재 203대 확보하고 있다.⁴⁵⁾ 이 전투기의 특징은 강력한 엔진과 탁월한 기동성, 세계 최고 수준의 레이더 화기관제장치 (FCS), 우수한 요격과 공격 능력을 겸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40) 森本敏, 『安全保障論 : 21世紀世界の危機管理』(東京 : PHP 研究所, 2000), p. 443.

41) 『중앙일보』, 2005년 4월 27일자.

42) 『조선일보』, 2005년 3월 31일자.

43) 防衛廳(2005), p. 361.

44) 防衛廳(2005), p. 102, 370.

45) 防衛廳(2005), p. 384.

또 일본은 본토와 그 주변지역에서 대(對)지 대(對)함 공격능력을 강화시킬 최신예 전투폭격기 F-2A/B⁴⁶⁾ (일본명 : 지원전투기)를 자체 개발하여 항공자위대에 배치하고 있다. 일본은 이 항공기를 2005년 3월 31일 현재 모두 61기 확보하고 있다.⁴⁷⁾ F-2A/B의 배치로 일본은 본토와 그 주변 지역의 대(對)지와 대(對)해상 공격능력을 대폭적으로 향상시켰다.

2. 군사·정치적 영향력 증대

일본은 전시시⁴⁸⁾ 전투지역이 아닌 후방지역에서 미군에 대한 지원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일본이 지원하기로 한 시설사용 편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미국 항공기와 선박은 보급 등을 목적으로 자위대 시설과 일본 내의 민간공항과 항만을 사용할 수 있다. △자위대 시설과 민간공항, 민간항만에 미국이 물자를 비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소와 보관시설을 제공한다. △미국 항공기와 선박이 자위대 시설과 민간공항, 민간항만 사용시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 지원한다. △미국 항공기가 자위대의 비행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미군에게 훈련장소와 연습구역을 제공한다. △미군시설과 구역 내에서의 사무소와 숙박소 등의 건설을 위해 지원한다⁴⁹⁾는 것이다.

또 일본은 보급, 수송, 정비, 위생, 경비, 통신 등 전시시 필요한 다양한

46) 이 기종은 일본이 미국제 병기 F-16을 모델로 하여 미국과 공동연구로 개발한 것이다. 미국은 일본이 이 항공기를 자체의 기술로 독자 개발할 경우, 항공기 분야에서 미국의 기술 수준을 위협하고, 병기체계의 상호운용성의 범주를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일본에 공동 개발토록 압력을 행사하였었다.

47) 防衛廳(2005), p. 384.

48) 일본 정부는 실질적으로는 전시에 사용될 수 있지만, 평시에서도 협력이 가능한 물자의 사전집적에 대해서는 매우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 왔었다. 오노 외상은 1988년도 2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집적된 장비를 극동의 전시에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안보조약 제 6조의 목적에 합치하는 한 위반은 아니다.”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당시 외무성의 한 조약국장은 보다 명확히 “(사전집적 장비)를 극동유사에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49) 小林秀之・西譯優・新ガイドライン研究會(1999), p. 81.

지원활동을 펼치기로 하였다. 이는 국제사회에서의 정치적 영향력 강화를 위해, 군사적 역할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전략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은 미군에 대한 '군사적 간접기여' 확대를 통해, 냉전기 소극적 군사 역할로부터 야기된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고, 군사·정치적 영향력을 국제사회에 행사하려는 것이다. 냉전시기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가 주장한 자주외교를 향한 군사적 역할 확대가 비로소 결실을 맺고 있는 셈이다.

모리모토 사토시 교수는 일본이 유엔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로 3가지를 들고 있다.⁵⁰⁾ 첫 번째가 군사적 활동을 포함하는 국제연합의 평화유지 기능에의 공헌이다. 두 번째는 국제연합의 예방외교 활동에 대한 지원이다. 이를 위해 일본은 기존에 수행해 왔던 정부개발원조(ODA)⁵¹⁾를 분쟁예방이라는 관점에서 재조정하여 지원하고, 타국과 공동초계 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한다. 세 번째는 난민구조와 같은 위기대응 활동에 일본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3. MD와 기술협력강화

일본은 미국과의 군사기술협력에 적극적이다. 군사기술은 현재 군사력의 물리적 파괴력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는 데다, 양국 모두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보유국가로서 기술협력은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윈윈(win-win)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일본은 군사기술에 있어서 최강국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달리고 있다. 미국은 지난 1986년 일본의 F-2A/B 전

50) 森本敏(2000), pp. 88-90.

51) 일본의 정부개발원조는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세계 정상수준에 도달하였다. 1993년의 경우, 일본은 당시 최대의 대외 원조국인 미국을 제압하고 세계 1위를 점유 하였다. 1993년의 원조 총액은 1백 14억 7400만 달러에 달하였다. 일본의 정부개발 원조는 이후 증가 추세를 보여, 1994년은 1백 33억 4700백만 달러, 1995년에는 1백 45억 달러였다. 1996년도에는 일본이 재정적자에 직면하면서 감소 경향을 보였다. 96억 달러로서 전년도 대비 49억 달러가 감액되었다. : 平和安全保障研究所 編, 『アジアの安全保障 1995-1996』(東京: 朝雲新聞社, 1995), p. 167 ; 『서울신문』, 1997년 6월 9일자.

투폭격기 개발과 관련하여 선진 국가간 기술력을 조사한 바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본은 컴퓨터·기계 등 4개 분야 중 광학·전자기술 분야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미국에 이어 유럽을 제치고 2위로 랭크되었다.⁵²⁾

일본의 하이테크 기술의 우수성은 1993년 미국이 실시한 위성관련 기술 평가에서도 잘 입증된다. 일본은 우주용 광파통신 등 8개 분야에서 우세, 고용량 데이터 위성통신 등 5개 분야에서는 미국보다 열세, 우주선용 안테나 등 4개 기술에서는 미국과 동등 수준인 것으로 각각 평가되었다.

일본은 전후 민간부분의 기술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여 현재 응용제조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 결과 소재·부품·서버시스템 기기 분야에서의 기술 능력이나 가격 수준은 세계 정상의 미국 제품과 견줄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핵심기술이나 부품 관련의 기반기술은 미국의 도움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군사 기술의 핵심이라 할 소프트웨어 분야는 미국과 비교, 크게 낙후되어 있어 미국과의 기술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미·일 양국의 군사기술협력에 있어서 대표적 프로젝트로 부상한 분야가 탄도미사일 방어체제(MD)개발이다. 이는 막대한 예산과 최첨기술이 총동원되어야 할 대규모 기술집적 프로젝트이다. 1996년 4월의 「미·일안보 공동선언」은 MD개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양국 정부는 대량 파괴병기와 그 운반수단의 확산이 양국 공통의 안전보장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인식한다. 양국 정부는 대량 파괴병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의 보조를 맞추는 것과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탄도 미사일의 방위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협력을 계속하기로 한다.”⁵³⁾는 것이다.

일본은 1998년 안전보장회의와 각의 승인을 얻어 MD 해상배치형 상층시스템의 일부를 대상으로 미국과 공동연구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듬해인 1999년에는 요격미사일의 4개의 주요 구성부품에 대해 미국과 공동연구에 착수하였다. 즉 미사일 중간단계 요격방어시스템의 주요구성 부품

52) “FSXと日美軍事技術摩擦,” 『世界』(東京: 世界 1988. 6), p. 81.

53) 防衛廳(1997), p. 326.

인 △노즈콘(적외선seeker 등 미사일 주요 부품을 공기 마찰로부터 보호) △적외선 seeker(표적 식별·포착·추적) △kinetic탄두(운동에너지를 이용, 표적을 파괴하는 탄두) △2단계 로켓모터 기술을 공동연구 분야로 하고 있다.⁵⁴⁾

그리고 2004년 12월에는 향후 MD 시스템의 공동개발로 양산될 장비의 대미 수출의 경우는 무기수출 3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여 그 제도적 장애물을 해소하였다.⁵⁵⁾

일본은 이러한 MD 개발협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미국으로부터 우수한 소프트웨어 기술을 입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센서(감지기)기술, 레이더 관련기술, 초고속 컴퓨터기술, 초고속 탄도요격기술, 신소재 기술 등이 거론되어 오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은 무기체계의 실전 데이터도 얻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일본은 MD에서 이지스함(SM-3 미사일 사용)에 의한 상층요격(대기권 외의 중간단계)과 패트리엇(PAC-3)에 의한 터미널단계(대기권 내) 요격을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다층방위를 기본 시스템으로 하고 있다. 미·일 기술수준으로 본 미사일 요격 명중률은 현재 70%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사일은 한발로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요격이 완벽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⁵⁶⁾

미·일 양국의 MD를 둘러싼 기술협력은 구체적 이행단계에서는 해결이 쉽지 않은 난제가 가로막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MD 개발의 핵심 분야는 지휘통제 시스템이다. MD 시스템이 상대방의 공격미사일을 요격하려면 지휘통제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즉 미사일이 발사된 직후, 곧 바로 발견·추적하여 광범위한 착탄 지점을 계산해내고 안내할 수 있는 군사위성을 포함한 지휘통제 시스템의 보유가 필수적이다.⁵⁷⁾ 이는 군사력

54) 防衛廳(2005), pp. 147-156.

55) 防衛廳(2005), p. 364. ; 米田建三, “「眞の威脅」中國に目を向けない新防衛大綱の行方,” 『正論』2004年 12月号, p. 279.

56) 防衛廳(2005), p. 148. ; 米田建三, “「待ったなしの自衛的攻撃力整備と美國依存の陥穽」,” 『正論』2005年 4月号, p. 284.

운용의 우위를 결정짓는 핵심기술로서 양국간 이해관계가 크게 상충되는 분야이다.

미국은 그동안 MD의 지휘통제시스템을 주도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의도를 보여 왔다. 「신지침」은 “미·일은 상호간 효과적인 방위 협력을 위해 ... 필요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갖춘 미·일 공동의 조정소를 평소부터 준비한다.”⁵⁸⁾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미·일 양국간 병기체계의 상호 운용성(interoperability)과 지휘통제 계통의 통합 수준을 높이려는 데 목적을 두고 설정된 것이다. 미국은 이 조항에 의거, 자국의 군사적 우위를 전제로 하는 동맹체제의 역학과 경쟁력의 우위를 선점한 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하여, MD 개발에서 시스템의 지휘통제 계통을 지배하려는 전략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미국은 MD 시스템의 중추적 분야인 조기경계위성 개발을 주도하면서 일본과 공동개발을 추구하려고 한다.

미국의 페리 국방장관은 1995년 초 일본 방문시 가진 기자회견 석상에서 “일본은 미국이 조기경계위성의 데이터를 제공해 주지 않을 것으로 불안해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할 것이다.”⁵⁹⁾며 MD 지휘통제 시스템의 독자개발의 의도를 간접적으로 표출한 바 있다.

일본은 미국의 이러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다.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지게 되면 결국 미국이 위성시스템을 제조·발사·운영하는 것으로 되고, 일본은 단지 미국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여 MD 시스템을 운용해야 하는 결과를 맞을 수 있다.⁶⁰⁾

외교·정치적인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일본은 MD 정보를 계속적으로 입수하기 위하여 미·일 관계를 미국의 관점으로부터 보게 되고, 일본은 결국 안보·외교 전반에 걸쳐서 미국에의 예속 심화가 불가피할 것이다.⁶¹⁾ 이러한 MD개발이 갖는 기술협력 구조를 생각해 볼 때,

57) 野木惠一, “戰域ミサイル防衛TMD,” 『軍事研究』, 1997年 1月, pp. 28-59 참조.

58) 小林秀之·西譯優·新ガイドライン研究會(1999), pp. 76-77.

59) 江畑謙介, 『軍事大國 日本の行方』(東京: kkベストセラーズ, 1995), p. 299.

60) 森本敏(2000), p. 437, 141.

61) 松村昌廣, 『日美同盟と軍事技術』(東京: 勁草書房, 1999). p. 79.

일본은 미국의 MD기술협력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다.

MD 시스템의 개발과 관련, 마쯔무라 마사히로 (松村昌廣)교수는 미·일 안보체제의 역학관계나 일본이 처한 입장을 고려하여 한정적인 기능을 보유한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일본은 미국의 군사적 우위에 도전하지 않는다는 기본 전제를 충족시키기 위해 조기경계 위성 시스템을 정지궤도상에 고정시켜 놓고, 동아시아만을 경계 대상으로 한다는 개발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⁶²⁾는 것이다. 일본은 현재 지휘통제 시스템을 갖춘 조기경계위성체제 기술에 있어서 이를 군사적 용도에 활용한 경험은 없으나, 민간 우주항공 산업부분에선 신뢰할 수 있는 상당한 기술력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⁶³⁾

MD 공동개발에서 일본이 어느 정도 수준의 독자기술력을 확보할 것인가는 미 군사력 우위를 전제로 하는 미·일동맹의 역학구조 하에서 일정한 한계를 갖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일본이 보유한 군사·경제·정치적 힘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본다.

V. 결론

일본은 냉전 종식 이후 종래와는 다른 군사·안보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경제우선·경군비전략에서 벗어나 군사적 요소를 중요 외교자원으로 올려 놓고 이를 대외정책 수단으로 행사한다는 것이다. 군사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군사·정치적 영향력을 국제사회를 향하여 적극적으로 펼쳐 보이겠다는 국가전략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분명한 일본의 국가적 명제가 되고 있다.

일본은 이러한 군사적 능력 및 역할 강화를 독자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미국과 역할분담을 확대하는 방법을 통해 도모하고 있다. 일본은 탈냉전기

62) 松村昌廣(1999), p. 148.

63) 松村昌廣(1999), p. 147.

불확실·불투명한 안보환경에 대응하여 미 군사력에의 안보의존을 여전히 중요시하면서, 미·일 안보체제 내에서 군사적 역량 확충을 피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일본은 미국과의 공조체제 강화를 통해서 냉전시기와는 다른 전력구조와 양질의 무기체계를 계속적으로 확보하고 군사적 역할 확대를 도모하겠지만, 그렇다고 대규모 병력을 해외로 투사하고 본격적인 원거리 타격능력을 갖춘 군사력은 보유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미 군사력 우위를 전제로 하는 미·일 안보체제 하에서 일본의 군사적 역량 강화는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미국은 현재 국제 군사·안보질서를 주도적으로 재편하면서, 일본을 하위 체계로 두고 일본의 군사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에 대해 역할분담 확대를 통해서 군비 확충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이 항공모함, 전략폭격기 같은 대규모 원거리 타격능력과 공격적 성향을 갖는 장비를 보유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반대한다.

<참고문헌>

- 김강녕, 『동북아 국제정치와 한반도』, 부산 : 신지서원, 2002.
- 남창희, “신방위협력지침에 따른 자위대의 역할 확대에 관한 연구,” 『國際政治論叢』 제37집 3호, 1998.
- 연현식, “전후 일본 방위정책 변화의 궤적,” 『국방정책연구』 2004년 가을,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 이갑윤, “미국 패권과 일본의 도전,” 『21세기 미국패권과 국제질서』, 서울 : 도서출판 오름, 2000.
- 上田愛彦・藤本晶土・彬山徹宗 外 編著, 『軍事データで讀む日本と世界の安全保障』, 東京 : 草思社, 2002.
- 江畑謙介, 『軍事大國 日本の行方』, 東京 : kkベストセラ-ズ, 1995.
- 小澤一郎, 『日本改造計劃』, 東京 : 講談社, 1993.
- 小林秀之, 西譯優, 新ガイドライン研究會, 『超明快譯で讀み解く日美/新ガイドライン』, 東京 : 日本評論社, 1999.
- 川上高司, 『米國の對日政策』, 東京 : 同文館出版, 2001.
- 島川雅史, 『アメリカ東アジア軍事戰略と日美安保體制』, 東京: 社會評論社, 1999.
- 長島昭久, 『日美同盟の新しい設計圖』, 東京 : 日本評論社, 2002.
- 防衛研究所(日本) 『安全保障國際 シンポジウム平成15年度報告書』, 2005.
- _____, 『東アジア戰略概觀』, 2004.
- _____, 『防衛戰略研究會報告書』, 2003.
- _____, 『東アジア戰略概觀』, 2001.
- 防衛廳(日本), 『防衛白書』, 2005/1997/1983.
- 防衛問題懇談會(日本), 『日本の安全保障と防衛力のあり方』, 1994.
- 平和安全保障研究所 編, 『アジアの安全保障,1995-1996』, 東京 : 朝雲新聞社, 1995.

- 森本敏, 『ガイドラインと有事法制/極東有事で日本は何が出来るのか』, 東京 : PHP研究所, 1999.
- _____, 『安全保障論 : 『21世紀世界の危機管理』, 東京 : PHP 研究所, 2000.
- 江口博保, “ミサイル防衛がわが國の防衛體制を変える,” 『DRC年報 2004』, <http://www.drc-jpn.org/AR-8/hyousi-04j.htm>(검색일 : 2005.1.19)
- 渡辺昭夫, “日美同盟の50年の軌跡と21世紀への展望,” 『國際問題』 No. 490, 2001. 1.
- 渡辺昭夫・伊奈久喜, “安全保障環境の變化と日美關係への衝擊,” 細谷千博・信田智人, 『新時代の日美關係』, 東京 : 有斐閣, 1998.
- 大外宏, “日本のODAと國際政治,” 五十風武士編, 『日本のODAと國際秩序』, 東京 : 國際問題研究所, 1990.
- 金田秀昭, “輕視してはならない「本格的侵攻への備え」...防衛計劃大綱改訂を目前にして...”(2004.11.11), <http://www.okazaki-inst.jp/hkaneda/112004kaneda.html> (검색일 : 2005.3.16)
- 佐瀬昌盛, “集團的自衛權小賢しき‘解釋護憲’,” 『諸君!』 2004年 5月.
- 船橋洋一, “21世紀 軍事力の新役割,” 『軍事力の非傳統的 役割と東アジアの安全保障』, 東京 : 防衛研究所, 2003.
- 米田建三, “「眞の威脅」中國に目を向けない新防衛大綱の行方,” 『正論』 2004年 12月号.
- _____, “「待ったなしの自衛的攻撃力整備と美國依存の陥穽’,” 『正論』 2005年 4月号.
- 松村昌廣, 『美國霸權と日本の選擇』, 東京 : 勁草書房, 2000.
- _____, 『日美同盟と軍事技術』, 東京 : 勁草書房, 1999.
- 森本敏, “美軍再編計劃と日米同盟の將來,” 『正論』 2005年 3月号.
- ラルソ・コサ, トマス・マクナウア, “アジア太平洋地域の平和安定と日美安全保障關係の役割,” 『アジア時報』, 1998年 4月号.
- “FSXと日美軍事技術摩擦,” 『世界』, 東京 : 世界, 1988年 6月.
- Allison, Graham T., "Conceptual Models and the Cuban Missile Crisis," in William D. Coplin and Charles W. Kegley (eds.), *Analyzing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 Praeger Publishers, 1974.
- Nye, Jr., Joseph S., "Coping with Japan," *Foreign Policy*, Winter 1992/1993.

Japan in 2000, Tokyo : The Japan Times, 2000.
『서울신문』, 1997년 6월 9일.
『조선일보』, 2005년 3월 31일 / 2003년 8월 7일.
『중앙일보』, 2005년 4월 27일.

<논문작성>

- 성명 : 김년수 (金年洙) * 정치학 박사(외교안보)
- 소속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책임연구원
- 주소 : 대전시 유성구 어은동 한빛아파트 118동 1406호
- 전화번호 : (자택) 042-861-7145 / Mobile : 019-403-7145
- 메일 : Kimns@etri.re.kr